

# 여야 대치에 본회의 무산...남은 7개 상임위장 선출 연기

### 국힘 "거야 독주 들러리 거부"...민주 "여당 일 할 의지 없어" 우 의장 다음주까지 이견 조율...헌정회 조속한 타협 촉구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제22대 국회가 원(院)구성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열린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의회의까지 나서 여야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은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형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지난 10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본회의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할 경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 계속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불과 사를 만나 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무리해 보인다"며 "내주 후반부까지는 협상을 계속 벌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의회의는 이날 22대 국회 파행 상황과 관련해 "조속한 타협으로 국민이 겪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에서 "엄중한 국가 혼돈 상황에도 여야는 난국 수습책을 논의하기는커녕 국회 운영을 파행하면서 대립과 상호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수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최근 쓰레기 풍선 침투를 자행했다. 대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을 겪으며 국민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정회는 그러면서 "여야는 조속히 적절한 협의의 기구를 통해 국난 수습을 위한 토론과 협상에 나서 달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양보와 협치를 이끌어 내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의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낸 정대철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3법 등 尹 거부권 법안 재발의

###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 대실립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의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 박찬대 "이재명 대표 기소는 소가 웃을 일"

### "조작 기소 정치검찰이 범죄집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목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못하는 것을 두고선 "여당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또 거부권 타령을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달간 일을 하지 않으면 형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원을 탕진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루팡', '월급루팡'(일하지 않고 돈만 받아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채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 병행 추진"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해병대 예비역연대 면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은 1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을 만나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채 해병 순직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파 관계 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시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상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이 단체와 면담에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은 비록 원내 3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도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실성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